

KIEP-EAI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컨퍼런스

#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2025년 6월 18일(수) 9:30~12:00

롯데호텔 서울 벨뷰 스위트 (36F)



KIEP-EAI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컨퍼런스

#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9:30~12:00

장소 | 롯데호텔 서울 벨뷰 스위트 (36F)

## PROGRAM

### 개회식

**개회사**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주호영 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9:30 ~ 9:45

**기조 발제**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상

9:45 ~ 10:00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 기조 발제 후 사진 촬영

### 세션 1: 분야별 한일 협력의 미래 비전

좌장: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발표 1: 한일 외교·안보 협력 미래 비전

10:00 ~ 10:50

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표 2: 한일 경제협력 미래 비전**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3: 한일 첨단기술 협력 미래 비전**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대학 교수

**발표 4: 한일 인문·사회 협력 미래 비전**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50 ~ 11:00 커피 브레이크

### 세션 2: 미래 비전을 위한 실천(정책) 과제

좌장: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토론** 토론 1: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11:00 ~ 11:50

**토론 2: 이토 코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

**토론 3: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조사연구원

**토론 4: 모리 도모오미** 세쓰난대 국제학부 준교수

### 폐회식

**폐회사**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1:50 ~ 12:00

# 개회사



**이 시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 원장은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및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통상학회(KATIS) 학회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입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님과 동아시아연구원 손열 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해 주신 한일 전문가 및 청중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60년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역사 인식의 차이는 때때로 양국 관계에 큰 갈등을 초래했으며, 국민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기술패권 경쟁 등 한일 양국은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은 양국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양국의 대내외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문·사회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현안 논의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 제시와 과제 도출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원은 민간 싱크탱크로서 각각의 영역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성찰 위에 미래를 설계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는 시작점입니다. 2025년이라는 해는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기여와 책임을 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공유해온 이웃입니다. 양국의 미래 관계는 협력과 상생, 그리고 공동 번영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와 만남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축 사



**주 호 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주호영 의원은 현재 국회 부의장이며, 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소속 국회의원이다.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 본 축사는 별도 자료 없이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 기조강연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현재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 겸 연세대학교 교수이며,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이다.

## 미래세대를 위한 결일(結日)론

“새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전화 통화 직후 SNS 메시지)

우리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말을 많이 써 왔다.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대화와 갈등으로 점철된 까닭에, 양국이 역사문제에 함몰되어 양국간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 넘자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60년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25년 현재도 현안을 안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양국 정부는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합의의 내용과 실행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으로서 한국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제시되었지만 한국측이 희망하는 만큼의 일본측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외교 현안으로 남아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문제는 그 자체 외교 현안인 동시에 경제와 안보 등 여타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 악화된 양국관계는 2019년 아베 수상의 무역 보복과 한국의 맞보복,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이어졌다. 양국 정부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과 불신으로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주저하고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 절하하며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제안 이후 양국 관계는 완전한 개선 단계로 전환되었다. 정부와 민간 교류가 회복되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협력이 신기원을 이루었다. 2025년



6월 4-5일 실시한 EAI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대일외교에서 우선 고려할 이슈’로 응답자의 50%가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을 꼽아 “역사문제 현안 해결”(32%)를 크게 앞섰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미래지향 협력이 35%, 역사문제 해결이 41%이었던 데 비해 커다란 변화이다. 역사문제에 발목 잡혀 양국간 무역, 기술, 안보, 기후변화 환경 등에서 양국간 협력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표 1] 신정부 대일 외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  
일본에 대한 인상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두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미국과 중국 리스크 동반 상승이다.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 리스크는 상수이지만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중국 리스크이다. 한국 경제는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중국에 공급망을 확장하고 중국 수출을 확대했으나, 한 때 수출의 28%를 중국시장이 점유할 정도로 과잉 의존 상태가 됨으로써 전략적, 안보적으로 중국에 취약성을 보이는 현실을 맞았다.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 압박에 시달리면서 한국은 과잉 의존을 축소하기 위해 탈중국화, 중국 + 1 등을 시도해왔다. 일본 역시 중국과 센카쿠 갈등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보복을 겪었다.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의 대안으로 한국은 미국에 수출을 확대했고 그 결과 대미 흑자 확대에 따른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맞았다.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의 결과라 하겠다. 또한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따른 안보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패권 쇠퇴 속 미국은 대외 개입을 선택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동맹국의 부담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한편으로 군사비 증강, 다른 한편으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압력으로 동병상련의 처지가 되었다.

# 기조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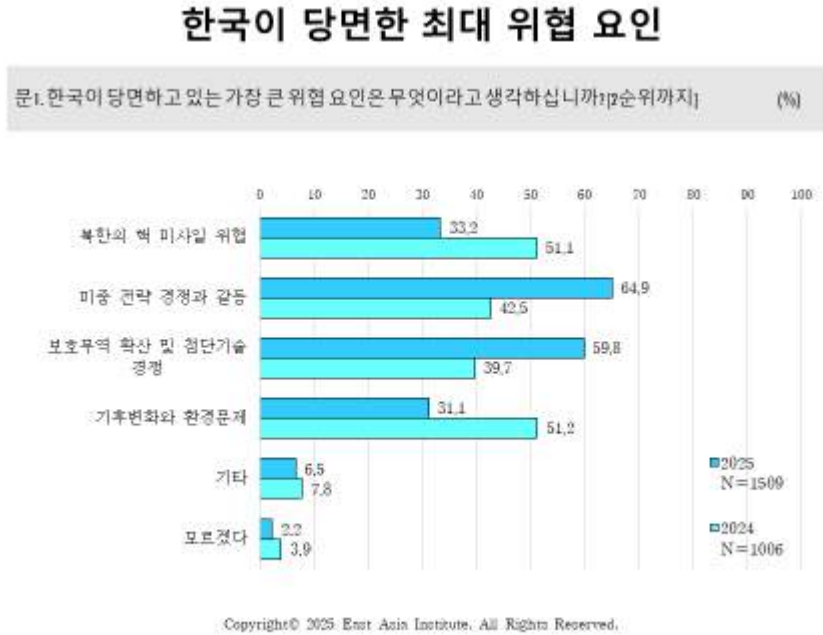
중국 의존에 대한 두려움, 미국 쇠퇴에 따른 동맹 불안에 더하여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갈등에 따른 위협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EAI 조사에서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 1위는 “미·중 전략 경쟁”(지난해 42.5%→64.9%)인 것처럼([표 2]) 중국, 미국, 미중관계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새로 평가하게 되었다.<sup>1)</sup> 일본 국력이나 외교력이 신장되어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 리스크를 축소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환경 변화가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국에 점증하는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축소는 데 자강(自強)은 한계가 있다.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와 결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본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1) 아래 회귀분석에 따르면 미중 갈등을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또한 보호무역 및 첨단기술 경쟁을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한일간 미래지향 협력에 필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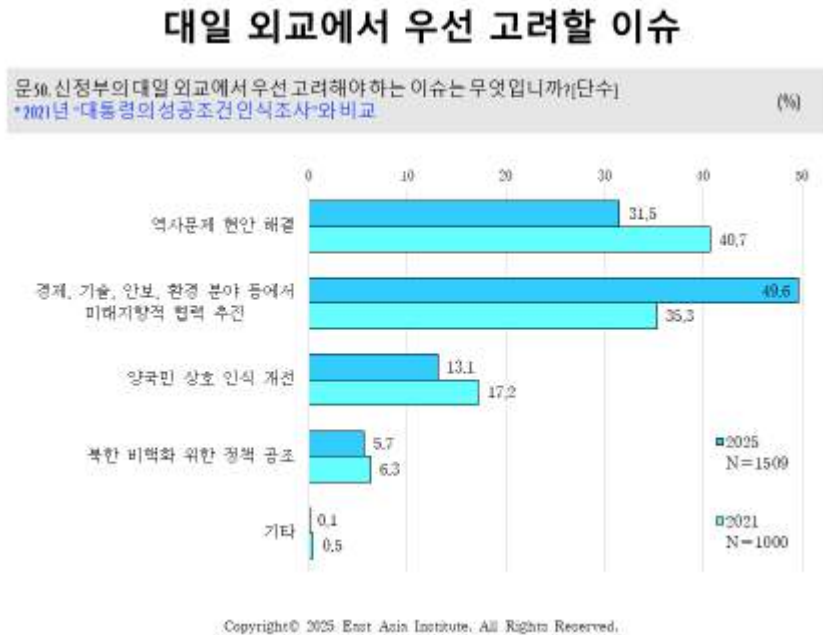
[회귀분석 결과표]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지지 요인

변수 (설명)	(1)	(2)	(3)	(4)	(5)
최우선 위협: 북한 핵 및 미사일 인식ROK_Threat_DPRK	0.612*** (3.69)	0.494** (2.92)	0.487** (2.87)	0.388* (2.23)	0.073 (0.40)
최우선 위협: 미중 갈등 위협 인식ROK_Threat_USPRC	0.576*** (3.92)	0.584*** (3.87)	0.576*** (3.81)	0.521*** (3.37)	0.402* (2.54)
최우선 위협: 보호무역/기술경쟁 ROK_Threat_TradeTec	0.472** (3.14)	0.522*** (3.36)	0.514*** (3.30)	0.454** (2.85)	0.308 (1.87)
트럼프 인상ROKUS_Trump	—	0.186** (2.91)	0.168* (2.57)	0.084 (1.25)	0.069 (0.99)
트럼프 관세 지지ROKUS_Tariff	—	-0.077 (-1.10)	-0.101 (-1.30)	-0.138* (-1.74)	-0.098 (-1.20)
한미관계 평가ROKUS_CurrentRelat	—	0.051 (0.66)	0.053 (0.69)	0.044 (0.55)	0.079 (0.98)
미국 신뢰도ROKUS_Trust	—	0.156** (2.81)	0.146* (2.58)	0.021 (0.34)	-0.002 (-0.03)
대중국 무역제한 지지ROKUS_PRCEXCon	—	—	0.050 (0.82)	0.004 (0.07)	0.011 (0.16)
한중 경제 경쟁 인식ROKPRC_EconRelat	—	—	0.171 (1.53)	0.101 (0.88)	0.073 (0.63)
중국 호감도ROKPRC_Favor	—	—	-0.009 (-0.15)	-0.042 (-0.71)	-0.090 (-1.45)
중국 신뢰도ROKPRC_Trust	—	—	0.005 (0.08)	-0.030 (-0.47)	-0.002 (-0.03)
일본 호감도ROKJAP_Favor	—	—	—	0.178** (3.23)	0.204*** (3.58)
일본 신뢰도ROKJAP_Trust	—	—	—	0.286*** (4.72)	0.223*** (3.56)
더불어민주당 지지PartyID_DPK	—	—	—	—	-0.029 (-0.18)

[표 2] 한국의 최대 위협 요인



[표 3] 일본에 대한 인상, 2013-2025.



# 기조강연

이러한 협력의 동인을 받쳐주는 배경 요인(둘째 요인)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기록적 상승이다. [표 3]에서 보듯이 2020년 대일 호감도가 12.3%에서 올해 63.3%로 상승하였다. 5년만에 5배 증가한 것이다. 일본 역시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상호인식 개선은 민간교류 덕분이다. 특히 양국 청년세대(MZ)를 주축으로 관광, 대중음악(K-Pop과 J-Pop), 식문화, 영화, 드라마 등 상대국 대중문화의 광범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상대국에 대한 선입견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상대국에 긍정적 인상을 형성하였고 호감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민간 수준에서는) **‘한일 신시대’에 진입**하였다고 말하고 싶다.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진 의지는 국제질서의 흐름과 국내 여론의 흐름과 잘 조응되는, 신시대의 개막을 향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관건은 첫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콘텐츠이고 둘째 정치적 여건이다.

역사문제가 아닌 협력 사안을 다룬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미래지향적’은 아니다. ‘미래’ 개념을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에게 다가올 미래로서의 시공간 개념이고 이는 미래세대의 몫이다. 짧게는 향후 10년 길게는 2050을 바라보는, 이들이 양국 사회의 주류 혹은 기성세대가 되는 시공간으로서의 미래라 할 수 있다.

적어도 향후 10년 중국의 체제와 전략,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트럼프 없는 트럼프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중 전략 경쟁 역시 가속화되고 한반도의 지정학 구조는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앞서 말한 한국과 일본이 처한 리스크는 지속 혹은 상승할 것이고 양국의 협력 유인은 커질 것이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함께 맞이할 핵심 도전은 여기에 있다. 경제면에서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 감축, 경제면과 안보면에서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 감축이란 이중 도전과제는 지금부터 전략적·장기적 시야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다. 기후 환경 및 에너지 위기, AI 기술의 혁명적 변화가 초래할 문제(오남용, 통제불능) 대응 등 오늘 논의할 주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도전에 대한 한일의 전략으로 1880년 조선의 김홍집이 청국의 황준헌으로부터 받아 온 ‘조선책략’의 개념을 원용한다면, 첫째 자유주의 패권 질서의 중심인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 혹은 남용하지 않도록 미국을 돕는 ‘친미(親美),’ 일본과 함께 가는 ‘결일(結日),’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한 중국과의 사안별 연대로서 ‘연중(聯中)’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결일’의 주체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이 엮여 있는 청년세대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란 선진국 세대로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의 미래세대가 결속하여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방향설정을 하고 돕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미래는 상충하는 사회적 이익에 따라 경합되는, 특히 세대간에 경합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다가올 미래는 청년세대 혹은 미래세대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준비는 상당 부분 기성세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 구상 그 시절을 살아갈 세대 보다는 역시 다분히 기성세대의 손에 놓여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상은 기성세대의 전통적 고정관념(‘반일 vs. 혐한’)을 넘어 미래세대를 보다 논의의 중심에 놓고 문제군을 설정하며 이들의 경험과 기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오늘 제시하는 연구결과와 토론이 그것이다. ‘결일’을 통한 ‘한일 신시대’의 개막을 기원한다.

그렇다면 미래세대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가 역사문제/현안에 대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후대에 미룰 경우, 기성 정체성 갈등이 지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

한국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는 희망보다는 리더쉽 리스크에 따른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럴수록 보다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공동설계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세대의 경험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KIEP-EAI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컨퍼런스

#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9:30~12:00

장소 | 롯데호텔 서울 벨뷰 스위트 (36F)

## CONTENTS

---

<b>발표 1</b>	<b>한일 외교·안보 협력 미래 비전</b> ..... 15
	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b>발표 2</b>	<b>한일 경제협력 미래 비전</b> ..... 31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발표 3</b>	<b>한일 첨단기술 협력 미래 비전</b> ..... 39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대학 교수
<b>발표 4</b>	<b>한일 인문·사회 협력 미래 비전</b> ..... 45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토론</b>	<b>[토론문 1] 남기정</b>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 57
	<b>[토론문 2] 이토 코타로</b>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위원 ..... 61
	<b>[토론문 3] 아베 마코토</b>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조사연구위원 ..... 65
	<b>[토론문 4] 모리 도모오미</b> 세쓰난대 국제학부 준교수 ..... 71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동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미래전연구센터 부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국제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현대 일본의 정치경제 및 외교안보 정책이다.

**발표 1**

---

# 한일 외교·안보 협력 미래 비전

**이 정 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한일 외교·안보 미래비전 2050

2025.06.18

이정환(서울대)

1. 군사 안보 협력
2.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협력
3. 기후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비전

# 1. 군사 안보 협력

## 1-1. 2050년 한국과 일본의 안보환경 결정 요인

1. 미국 패권 쇠퇴
2.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
3. 첨단 군사 기술 발달
4.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고도화
5. 동아시아 역내 다자안보제도의 미발전

## 1-2. 2050년 즈음 동아시아 안보환경 시나리오

1. 권력정치 회귀 시나리오
2. 미중 대립과 공존 병존 시나리오
3. 강대국 지정학 경쟁 속 중견국 중심의 다원적 지역질서 형성 시나리오
4. 강대국 경제적 상호의존 지속 가운데 정치적, 안보적 갈등이 격화되는 시나리오
5. 자유주의 질서의 요소가 유지, 강화되는 시나리오

## 1-3. 한일 안보협력 가능성과 방향

표 2-1. 2050년 아시아 지역질서의 시나리오			
시나리오	주요 내용	지역 영향	한일 역할
1. 권력정치 회귀	- 미중러 등 강대국 경쟁 심화 - 자유주의 질서 약화, 다극체제 강화	- 동아시아 안보 환경 불안정화 - 유럽-중동 등 다극화 가속	- 미국의 개입 약화 대비 - 자체 안보 역량 강화 필요
2. 대립적 공존	- 미중 냉전적 대립 지속 - 경제-안보 분리된 양진영 체제	- 동아시아의 미-중 진영 분할 - 군사적 충돌 리스크 상존	- 미 진영 편입 강화 - 대중국 관계 경색
3. 다원적 지역 질서	- 중견국 주도 다자안보체제 구축 - 강대국 경쟁 억제 메커니즘	- 지역 차원의 제도적 협력 확대 - 분쟁 예방 구조 정착	- 동아시아 협력 리더십 행사 - 다자협력 플랫폼 주도
4. 상호 침투적 경쟁	- 경제협력 유지 vs 안보갈등 병행 - 부분적 디커플링과 상호의존 공존	- 경제-안보 이중구조 심화 - 복합적 위기 관리 과제 증대	- 전략적 균형자 역할 강조 - 갈등 관리 메커니즘 구축
5. 자유주의 국제질서	- 미국 주도 국제질서가 유지되나 상대적 쇠퇴 - 도전국가의 경쟁은 지속됨	- 지역별 국제질서의 다양화와 분화는 강화 - 규칙기반질서를 유지하는 노력 지속	- 미국 주도 규칙기반 질서 강화를 지원 - 국제규범 확산 노력

## 1-4. 한일 안보환경 변화의 최대 요인으로 중국 핵능력 증강

- 미국: 경쟁자를 넘어 존재적 위협으로서의 중국 인식
- 중국의 핵능력 증강 방향성
- 2030년대 중반: 미중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점 형성 가능성
-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핵무기 지휘통제 시스템 변화 가능성
- 북중러 3국 간 핵협력 가능성
  - 2026년 종료 예정의 뉴 스타트 조약
  - 핵군비통제 부재 속 강대국의 핵전력 증강과 군비 경쟁 가능성
  -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중국과 러시아 간 전략 협력이 공고화

## 1-5. 일본의 군사안보 전략

-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방향성
  - 자위적 안보체제 →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포괄 안보국가
  - 방위능력의 질적, 양적 제고
  - 장거리 반격 능력, 다영역 통합 작전 능력, 무인 전력 확대
  - 경제 안보 정책의 빠른 발전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국제질서의 외교 담론
- 억제력 강화, 글로벌 정합성 추구, 기술 주도권 확보
- 미일 동맹 재구성과 심화



## 1-6. 한일 공동 대응전략 현황과 문제점

- 역사문제, 정치갈등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어 온 전략 협력의 기반 확대 노력
  - 2023년 캠프데이비드 선언: 삼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 협력의 구조적 제약과 정책적 한계
  - 위협 인식의 불균형
  - 양국 간 정치적 불신과 제도적 미비 상태
  - 미국 중심의 동맹구조에 과도한 의존성
  - 중국,러시아의 견제 및 보복에 대한 우려

## 1-7. 한일의 공동 대응전략의 비전과 목표

### 비전

1.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파트너십 형성
2.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적 안보규범 (주권 존중, 분쟁의 법적 해결, 군사적 현상유지) 강화 유지
3. 미중전략 경쟁 속 능동적 균형자이자 구조설계자로서의 역할 수행

### 전략적 목표

1. 한일간 공동 억제 능력 확보
2.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질적 제도화
3. 첨단 군사기술 중심의 양국 협력 노력
4. 미국 불확실성 요인 전제로 하는 양국의 자율성과 조정력을 갖춘 전략적 파트너십 준비

## 1-8. 한일 공동 대응 정책의 구체적 내용

1. 동아시아 핵균형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일 협력
  - 미사일 감시 정보 공유 능력 강화 및 협력 체계 강화
2. 한일 양국 각각의 군사력 증가와 상호보완성 증강 노력
3. 양국 간 위협의 인식 우선순위 조정
4. 미국과의 전략 협력 이외의 양국간 협력 강화
5. 기술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2.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협력

## 2-1.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 역사인식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 사이 대북 정책의 갈등과 인식 공유가 한일관계 성격에 중요한 변수
- 문재인-아베 시기:
  -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력으로의 길을 방해하는 훼방꾼
  - 아베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야기하는 재팬 패싱 가능성을 경계
- 윤석열-기시다 시기:
  - 2022년 이후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서 한일 양국의 대북 정책의 일치가 중요한 요인

## 2-2.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한일협력의 필요성

- 국제구조 변동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하여서 양국이 큰 국가 이익을 획득하고 지역 평화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대상 발굴이 절실
- 미중경쟁의 구조변동 차원이 아닌 한국이 일본과 협력하여 주도할 수 있는 정책 과제로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복귀와 경제발전 등을 다시 고려할 수 있음
-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의 현실적 방법론 추진에서 한일협력의 중요성이 발견
- 북한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한일협력을 고려

## 2-3. 북한 인프라투자의 잠재 수요와 재원 문제

- 2010년대 후반 북한 인프라 개발 잠재수요 추산: 대략 10여년간 300조원 가량
- 현재 북한의 국가역량에 비추어볼 때, 북한 당국이 이 재원 조달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국제금융시장에 연결성이 부재하고 국제금융규범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의 민관협동 파이낸싱 사용의 제약성
-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 제약성

## 2-4. 북한 인프라투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관여 가능성과 한계

### 한국

- 남북협력자금과 공적개발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사용의 제약성

### 일본

- 북일국교정상화의 과제와 경제협력 자금
- 2002년 평양선언 당시에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의 액수가 북일 양국 관계자 사이에 논의
-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 및 중국, 러시아 등의 관여 가능성 속에서 일본의 주도적 역할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

## 2-5. 북한 인프라투자에 대한 국제협력 제도들의 필요성

- 북한 인프라투자는 세계와 북한의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역할
- 주변국의 공적 자금과 국제금융자본이 북한에 투자되었을 때, 이는 북한에게 국제금융시장에 적응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성공적 개혁개방에 대한 지지의 토대가 될 것
- 북한 인프라투자에 대한 국제협력은 크게 다자주의적 틀과 지역적 협력 틀 두 가지가 주로 논의

## 2-6. 다자간 개발금융 활용방안: 북한개발 신탁기금 구상

-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다자공여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을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북한 인프라투자에 대한 국제협력으로 논해져 옴.
- 신탁기금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유엔개발그룹과 세계은행
  - 대북 인도지원의 국제협력에서 인프라투자의 국제협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개발그룹이 운영하는 신탁기금을 먼저 출범시키고, 북한의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에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신탁기금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 2-7. 북한 인프라투자에 대한 지역협력 구상: 동북아개발은행 구상

- 역내 국가 체제이행을 위한 지역협력 제도들 형성 사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비경제적인 목적을 지니는 역내 체제이행국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지원 협력 프레임이라는 점
- 동북아개발은행 구상 재추진 필요성
  -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다자간개발은행의 설립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로 진행된 바 있음.
  - 2000년대도 재론
  - 2020년대 이 시점에서도 북한 인프라투자에 대한 지역협력 제도 구축은 동북아개발은행의 재추진으로 통해 모색할 수 있음.

## 2-8.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의 재구축에 대한 한일협력 모색

- 북한의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조율된 관여가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를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 틀 구축이 필요
- 다만, 한일 양국의 독자적 양자의 대북 지원 체제 구축은 지정학적 고려 속에서 현실성이 떨어짐.
- 한일 양국의 북한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관여의 체제는 보다 보편적인 틀 속에서 구축되고, 이에 대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관여가 어렵지 않으며, 여러 MBD와의 공조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동북아개발은행 유용성이 있음.
- 동북아개발은행의 제도 형성에서 한일 양국은 중심적 역할을 추진해야 하는 행위자

### 3. 기후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비전

#### 3-1. 인류 공동 과제로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이미 글로벌 안보 문제
- 기후위기 시대에 다양한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이슈 등  
장
  - 대량 난민의 발생, 에너지원 확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 보건 위기로 인한 국제적 갈등, 식량 생산성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오는 식량안보 문제 등
-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



## 3-2. 한일 양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 한일 양국 2020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하고 법제화한 국가
- 양국의 중간목표
  - 한국: 2030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2018년의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
  - 일본: 2013년 자국의 배출량 대비 46%를 감축하기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
- 한일 양국: 유사한 에너지 공급 구조 속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에너지 전환이 공통의 과제
- 공통의 과제를 위한 한일협력의 필요성 존재

## 3-3. 한일 양국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 공통의 목표: 전략 부분의 탈탄소화
- 무탄소 전력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와 정책 거버넌스의 차이가 존재
  - 한국: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둘러싼 정치화와 정권 변화와 연계된 정책 변화가 존재
  - 일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간 정치적 내지 이념적 대립이 한국에 비해서 약하며, 정책적 연속성이 존재
-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차이
  - 한국: 공기업에 의한 국가적 독점구조
  - 일본: 지역으로 분립되어 있는 구조, 민간기업의 전력 시장 참여

### 3-4. 한일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그리고 첨단 기술 개발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
- 협력 기대효과
  - 양국의 협력은 글로벌 협력 문화와 규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이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한일 양국의 경제 규모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계속 축소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 간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음.

### 3-5.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원자력 협력

- 한일 양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공동 구매 및 공동 비축 시스템 구축
  -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대응
-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기술 실증 프로젝트 공동 추진 및 관련 법제도 정비 공동 연구
-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농축 능력 개발 및 발전에 대한 협력

## 3-6. 협력 추진 전략

- 정부 간 협력 체계의 제도화
  - 고위급 에너지·기후 관련 회의 정례화
  - 한일 양국간 경제판 2+2 체제 구축
- 기업간 실질 협력 플랫폼 구축
  - 기술 및 시장 정보 교류를 위한 상설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한일 공동 투자펀드 조성
  - 산학연 컨소시엄 형성
- 인재 양성 및 교류
- 지역 및 글로벌 다자 협력과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며,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감사원 연구관,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전문위원 및 한일의원연맹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일본 경제 및 산업이다.

# 한일 경제협력 미래 비전

---

김 규 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일 경제협력 미래비전

김 규 판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eiokim@kiep.go.kr

2025.6.18

###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경제안전보장 분야**
  - 1. 미래비전
  - 2. 공급망 협력
- II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1. 미래비전
  - 2. 과제
- III 기후변화 대응 협력: 수소사회 실현**
  - 1. 미래비전
  - 2. 과제
  - 3. 협력의제

## I. 경제안전보장 협력

### 1. 미래비전

-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은 한·미·일 동맹 강화 관점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자 미래 첨단 산업·기술의 육성·보호 수단으로 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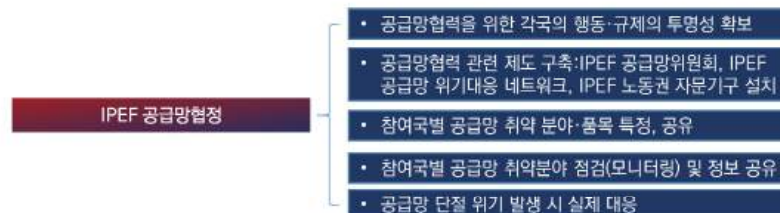
3

## I. 경제안전보장 협력

### 2. 공급망 협력

- (미국주도의 다자간 협력) 트럼프 행정부, IPEF 폐지→ 인태지역내 우호국간 다자간 공급망 협력으로 계승

-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MAFA(Make America First Again) 전략으로 윤석열 정부의 IPEF\* 활용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  
\*참여국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 및 피지(14개국)
- ✓ 한국은 '24.9월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부의장국은 일본)으로서 IPEF 14개국이 워싱턴 D.C에서 공급망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자간 공급망 협력에 역점을 둠.
- ✓ '24.4월 발효한 「IPEF 공급망협정」은 “인태지역에서 우호국과의 평시·긴급시 공급망을 강화하여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급망 단절시 참여국 간 구체적인 협력절차를 규정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일본 외무성·경제산업성, '24.2월)



- ✓ 미·중 대립이 지속되는 한, 한·일 양국은 공급망 단절 위기 계속 직면→IPEF 공급망협정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 '25.5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제주도) 시 개최된 CPTPP 각료급 회의(후술) 참조

4



## 1. 경제안전보장 협력

### 2. 공급망 협력

- (양자간 협력)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는 LNG 공동조달을 통한 한·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이 진전

- ✓ '23.4월 한국가스공사와 JERA는 △LNG 공동구입·거래 △에너지안전보장을 위한 수급대응협력 △LNG 프로젝트의 정보교환 △프로젝트 참여기회의 공동발굴을 명시한 MOU를 체결→'24.10월 LNG産消會議에서 Cargo Swap 거래 등의 시행에 합의. 한국가스공사·JERA·JOGMEC은 'CLEAN Initiative'도 결성
- ✓ '25.2월 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알래스카 LNG 개발계획\*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치의 협상카드로 급부상. 한국과 일본의 참여 여부에 귀추가 주목. 다만 미국의 '관세조치'(압력)에 대한 대응을 공급망 강화 관점에서 해석 가능?  
\* 북극권 가스전에서 남부로 ,300km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신설 액화플랜트에서 연간 2,000만 톤의 LNG를 동아시아지역에 판매한다는 프로젝트. 2030년대 가동개시 목표. 총사업비는 440억 달러 예상

- (양자간 협력)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자원을 둘러싼 자원민족주의 대두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

- ✓ 한국과 일본은 리튬, 천연흑연, 희토류 일부 품목에 대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음→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 대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산업성과 공급망파트너십(SCPA: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추진 중

#### 1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자원(특히, 희토류) 공급망 협력에 공동 대응. MSP 중단 이후 공동대응도 모색

- ✓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한국이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의 창국을 수임하는가 하면, '24.9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호주 BRM(Black Rock Mining)의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Mahende graphite mine) 개발 프로젝트의 추가 지분투자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양. 일본 역시 '24.2월 JOGMEC이 콩고민주공화국 GECEMINES와 로비토회랑(Lobito Corridor) 개발(구리캐드, 수산화코발트)에 관한 MOU를 체결

5

## 1. 경제안전보장 협력

### 2. 공급망 협력

#### 한국과 일본의 주요 핵심광물 對中 수입의존도 비교(2023년)

핵심광물자원	한국		일본	
	세부품목	對中의존도	세부품목	對中의존도
리튬	산화리튬	99.7%	산화리튬 및 수산화리튬	85.9%
	수산화리튬	79.6%		
천연흑연	인상흑연	92.6%	분말 또는 후	89.5%
	토상흑연	93.9%	레이크형대의 것	
희토류	테르븀그룹	99.6%	산화이트륨	78.2%
	에르븀그룹	97.4%	산화란타넘	99.5%
	이트륨	95.4%	기타의 것	83.4%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

#### 2 한·일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 활성화:양국 광물자원개발공사와 정책금융기관간 협력체제 강화

- ✓ 2010년대 초반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관리공단)와 일본 종합상사의 협력 사례→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개발 프로젝트와 브라질 희귀금속(니오븀) 광산개발 프로젝트
- ✓ 한국수출입은행과 JBIC의 PF 협조용자는 2010년대 중반과 최근 다시 활성화. '23.6월 제3국에서의 인프라 개발, 공급망 강화, 탈탄소화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자 및 인건 형성에 관한 협력각서 체결. '24.3월 칠레 센티넬라(Centinel) 구리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협조용자 참여. 한국수출입은행은 LS의 구리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자금을 융자

#### 3 핵심광물자원의 리사이클 협력:정부 간 정책대화를 통해 정책공조 및 협력프로젝트 발굴

- ✓ 한국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입법화 추진 중. 일본 역시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해 2025년 정기국회에서 「자원유효이용촉진법」 개정안 심의중.
- ✓ EU의 리사이클 제품 사용의무화 규제가 전기차(EV)·배터리에도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EU의 리사이클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

6

## II.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1. 미래비전

-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에 가입하거나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글로벌 자유무역질서 유지에 공헌

- ✓ 한국의 CPTPP\* 가입은 무역·투자자유화에 따른 실질 GDP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

\*CPTPP: 2018년 정식 발효. 현재 가입국은 일본,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브루나이,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대만은 '21.9월 정식 가입신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을 검토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IPEF 공급망협정에 대한 입장이 소극적인 가운데, CPTPP 가입국들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나 시장 왜곡적 관행에 대한 대응, 공급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협정문 개정을 추진('25년 하반기)

- ✓ '25.5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제주도)에 맞춰 CPTPP 각료급 회의 개최→금년중에 EU/ASEAN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

한국의 TPP11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2017년)

(단위: 실질 GDP 성장률, %)

참여시점		관세감하율		관세만 고려		관세+비관세고려	
		제조업	농/수산업	발효 후 5년	발효 후 10년	발효 후 5년	발효 후 10년
1	TPP11과 동시발효 (2018년)	100%	99%/99%	0.34	0.72	1.00	1.76
2	TPP11 발효 2년후 가입(2020년)	99% (對日 95%)	99%/99% (일/멕시코 95%)	0.31	0.65	0.91	1.61
		99% (對日 90%)	99%/99% (일/멕시코 95%)	0.30	0.63	0.90	1.59
3	불참			-0.06	-0.14	-0.08	-0.18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12)

7

## II.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2. 과제

- 한국 CPTPP 가입을 "퍼주기식 對日 통상외교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 온존

- ✓ 윤석열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에 소극적: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합의에 더해 CPTPP 가입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듯

- 다만 문재인 정부는 '21.12월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착수하여 △지역사회 간담회 △업종별 회의회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2년 3월 공청회를 거쳐 4월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TPP11 가입시 한국의 對日 무역수지/무역액 변화 추정(2017년)

단위: 100만 달러

HS 코드	품목	對日 무역수지 (2016)	무역수지 변화				對日 무역액 (2016)	무역액 변화			
			(1)수입수요탄력성( $e_K^D$ )=1		(2)MAX( $e_K^D$ )=3			(1)수입수요탄력성( $e_K^D$ )=1		(2)MAX( $e_K^D$ )=3	
			5년 후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28-38	화학제품	-5,227.5	-220.9	-236.6	-225.5	-243.9	10,109.7	300.0	315.7	315.3	333.8
78-83	금속제품	-3,165.9	-123.4	-123.1	-126.2	-126.0	10,389.6	151.5	151.8	166.2	166.5
84-85	기계·전자	-10,656.4	-558.1	-587.0	-654.6	-686.2	25,801.6	567.1	596.0	662.4	694.0
86-89	운송장비	-1,006.5	-125.6	-125.6	-105.7	-105.8	3,237.6	125.6	125.6	105.7	105.8
90-92	정밀기기	-3,209.0	-1,84.8	-186.8	-149.7	-151.4	4,148.3	187.5	189.6	155.7	157.5
Total		-22,447.7	-1,463	-1,483	-1,534	-1,580	72,485.4	1,846.5	1,925.9	2,056.8	2,144.8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12), unpublished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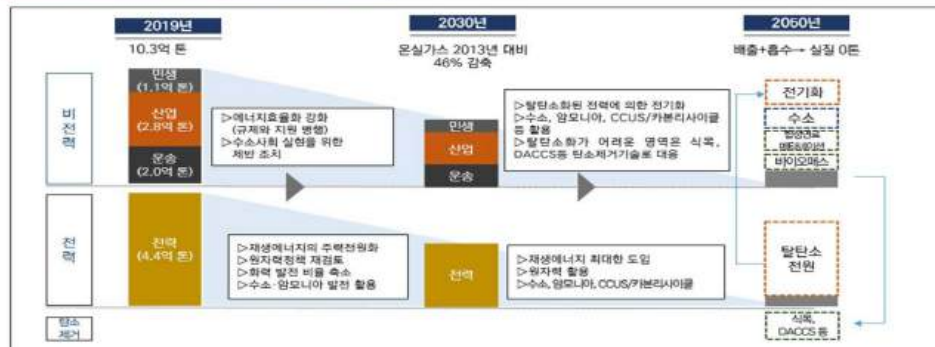
### III. 기후변화 대응 협력: 수소사회 실현

#### 1. 미래비전

- 한일 양국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사회실현이라는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함.

- ✓ '23.11월 한·일 정상은 '수소·암모니아 글로벌 가치사슬 구상'(Hydrogen Ammonia Global Value Chain concept)을 선언. 제3국에서 수소·암모니아 공동 조달, 공급망 안정화에도 합의
- '24.6월 산업통상자원부/경제산업성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 개최

#### 일본의 2050 탄소중립실현 로드맵



자료: 경제산업성, 2021.5월

- ✓ 한국→2030년 연간 수소공급량 목표치 100만 톤(그린수소 25만톤), 2050년 500만톤(그린수소 300만톤) 제시. 일본→2030년 최대 300만 톤, 2050년 최대 2,000만 톤 제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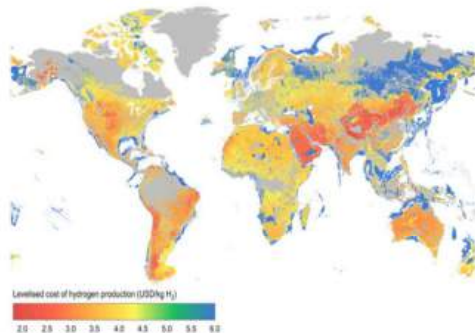
### III. 기후변화 대응 협력: 수소사회 실현

#### 2. 과제

- 한일 양국 모두 그린수소 제조능력이 부족→국내외 재생에너지 전력 개발이 중요. 그린수소 공급망구축

- ✓ 2050년 연간 수소수요량 예측, 일본→500만~3,500만 톤, 한국→400만~2,000만 톤 예측(Natural Resources Canada(2020). 양국 모두 공급부족 예상
- ✓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한국→8%, 일본→24%, 독일→52%, 세계전체평균→30%(IEA)
- ✓ IEA(2024)는 NZE 시나리오에서 2030년 그린수소의 생산비용 저감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중동지역, 미국 일부지역, 호주 등지에 국한되고, 한국과 일본은 그린수소 제조에서 국제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 세계각국의 그린수소 제조단가 분포



자료: IEA(2024)

- 한·일 양국은 수소관련 R&D 능력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 실적이 전무

- ✓ '11년부터 10년간 수소관련 국가별 특허출원 실적을 보면, EU(28%, 독일 11%, 프랑스 6%), 일본(24%), 미국(20%)이 주도. 한국도 7%를 차지. IEA(2023).
- ✓ 일본→수소 제조기술과 저장·운송기술, 이용기술 전문분야에 걸쳐 기술우위(RTA)를 확보. 한국→수소 이용기술 분야(자동차 등)에서 기술우위 확보

10



#### 3. 협력의제

##### 1 해외 그린수소 프로젝트 공동 발굴

- ✓ 현재 한·일 기업간 수소·암모니아 제3국 공동조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사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협력사업을 그린수소의 해외 공동개발 및 공동조달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 이때 한·일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정책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JBIC, NEXI)의 협조융자(co-finance) 및 보증을 활용

##### 2 공동 R&D 협력

- ✓ 한·일 양국 정부는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정책대화(Policy Dialogue) 채널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현안을 논의하고 양자간 혹은 국제 공동연구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
- ✓ 다만, 수소·암모니아 분야에 국한하여 한·일 간 R&D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에는 일본이 운용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도 하나의 방안

##### 3 수소규범: 그린수소 인증제도 구축

- ✓ 현재 세계각지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대부분은 블루 혹은 그레이 수소. 미래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 조성을 염두에 두고, 한·일 양국은 그린수소 제조에 관한 인증 기준 도입에 서로 협력할 것을 제안
- ✓ 최근 EU, 영국, 미국 등은 저탄소 기준치(Emissions intensity level)에 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과 일본은 이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그린수소 제조·유통에 관한 논의가 부진

11

감사합니다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학력: 칭화대학교 정밀기계공학사,  
KAIST 기술경영 공학석사/공학박사  
경력: 전)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장,  
현) 현대중국학회 과학기술분과  
위원장  
현) 한중사회과학학회 디지털경제  
분과위원장  
현직: 한양대학교 ERICA  
글로벌문화통상학부 조교수/  
로봇공학과(겸임),  
LIONS 자율전공학부  
학부장(인문사회계열)

## 한일 첨단기술 협력 미래 비전

백 서 인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대학 교수



# 2050 한일 첨단기술 협력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2025. 6. 18. 백서인(HYU 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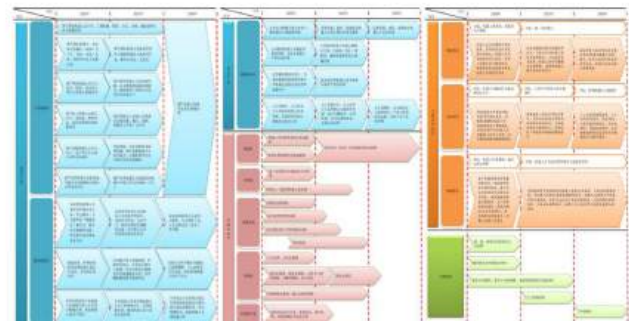
### 협력의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한일 공동 대응 필요
- 공통의 글로벌/사회적 도전과제 → 고령화/저출산, 노동력 부족,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등
- 상호보완적 기술역량 → 일본: 하드웨어, 정밀 제조, 소재/부품/장비 한국: 가전, 반도체 제조, AI 응용
- 과거 갈등의 교훈(2019년 수출규제) → 지속가능한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

[일본의 반도체 생산량 및 점유율(경제산업성, 2021)]



[중국제조 2025 기술 로드맵(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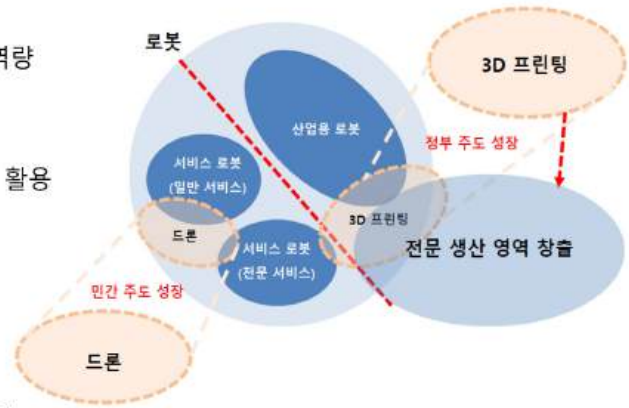






## 왜 휴머노이드 로봇인가?

- 기술적 상호 보완성  
일본의 산업용 로봇 기술(핵심부품) + 한국의 AI 역량
- 공통 사회적 수요  
고령화, 노동력 부족 → 의료, 요양, 서비스업 분야 활용
- 산업 생태계의 특성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체계 및 강소기업 보유
- 글로벌 경쟁 및 경제/기술 안보  
미국(Tesla Optimus), 중국 대비 차별화된 경쟁 우위
- 로드맵: 기반 구축(2025-2032) → 본격 확산(2033-2040) → 글로벌 허브 도약(2041-2050)



## 협력 의제(안)

### 기술/공급(Technology/Supply)

- 요소기술: 생체모사 기술, 사회적 지능인식 기술, 차세대 에너지 기술 **대학** **연구소**
- 플랫폼 기술: 하드웨어 아키텍처, ROS, 로봇 개발자 생태계 등 **기업** **대학** **연구소**
- 데이터 및 인프라: 로봇용 액션 토큰, 로봇용 합성데이터, 로봇 리스크 프레임워크 등 **기업** **대학** **연구소**

### 시장/수요(Market/Demand)

- 공공 행정: 시민 서비스, 행정지원 **정부**
- 재난 대응: 소방구조, 재해복구, 위험물 처리 **정부**
- 의료/헬스케어: 병원보조, 재활지원 등 **정부**
- 교육: 교육 보조, 가상-현실 융합 **정부** **기업**
- 규제: 한일 글로벌 샌드박스 운영 **정부** **대학**
- 표준: 휴머노이드 글로벌 표준 협력 **정부** **연구소**

### 생태계(Ecosystem/In between)

- 전략 펀드 조성: 딥테크 상호 진출, 글로벌 혁신 허브와의 전략적 제휴 **정부**
- 인적자원 교류: 공동 학위, 신진 연구자 교류, 산업체 인턴십 강화 **대학**
- 미래기술 탐색: 비온드 휴머노이드 이니셔티브, 초세대 장기 공동 연구 **연구소**

## 결론 및 시사점

- **사회문제 해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제조업 노동력 부족 등 공통 문제 대응
- **기술 주권 강화:** 핵심기술 자립도 제고, 공급망/생태계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 **신성장 동력 창출:**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 **지역협력 Best Practice 도출:** 동아시아 기술혁신 선도 모델 구축 및 지속가능한 협력 증진
- **Robot for All:**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제3의 대안 제시 및 확산

## Q & A

## 발표 4

---

# 한일 인문·사회 협력 미래 비전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 한국외대 특임교수이며,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및 와세다대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전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외교부, 국방부 및 한일의원연맹, 민주평통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 한일 인문 · 사회 협력 미래 비전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목차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2. 한일 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과제
3. 한일 언론 협력
4. 문화 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 한국과 일본의 인구변화: 특수성, 전망, 함의 및 문제들
- 한국과 일본의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방소멸: 변화, 전망
- 지방소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 및 협력방안



##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 □ 현황 및 전망



- (2050년 예상 인구) 일본 1억 468만명, 한국 4,234만명
- (2022년 기준, 기대수명) 일본 84.7세, 한국 83.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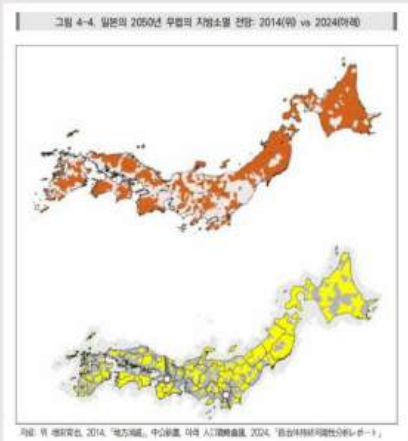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비율
- (1960년경) 일본 8.9, 한국 5.3 → (2025년 현재) 일본 50, 한국 20 → (2050년) 한일 80



##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 □ 현황 및 전망



- 2014년 전망 - 896개(전체 52%), 2024년 전망 - 744개 (전체 43%)
- 소멸 위기 지역이 감소한 이유: 외국인 이주



-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 과도한 경쟁 & 미래 불안 - 비혼/만혼 증가 - 출산율 저하



##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 □ 한국과 일본의 인구위기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

-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 로봇, AI 활용 증가, 유휴노동력 활용, 정년 연장, 외국으로부터의 이주
- 노년 인구 증가 ▷ 사회복지 비용의 급격한 증가 ▷ 재정 부담 증가
  - 연금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 정년 연장, 연금 수급시기의 연기
- 젊은 인구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의 문제
  - 외국인 인력의 지방 유입 등을 통한 지방 인구 유지 및 지방 행정구역 광역화





##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 인구구조 위기[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에 대한 한일의 상호협력 가능성
  -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의 교류 및 공동포럼 개최
  - 한일 간의 청년 및 스타트업 인재 교류
  - 디지털 기반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술 협력
  - 한일 공동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
    - 지역활성화, 한일간 생활인구/관계인구의 확충



## 2. 한일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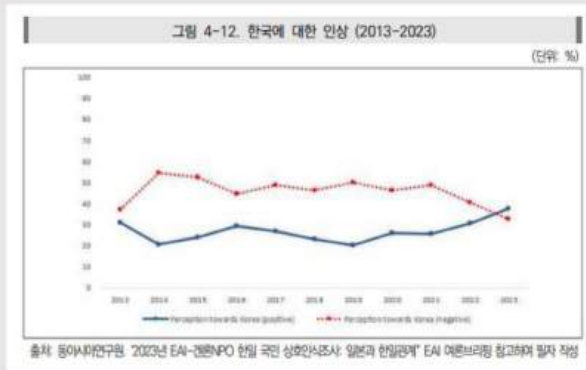
- 앞으로의 한일관계, 미래세대에 거는 기대
- 한일의 상호인식과 미래세대
- 교류와 인식, 협력의 상관관계
- 한일 미래세대의 협력과 향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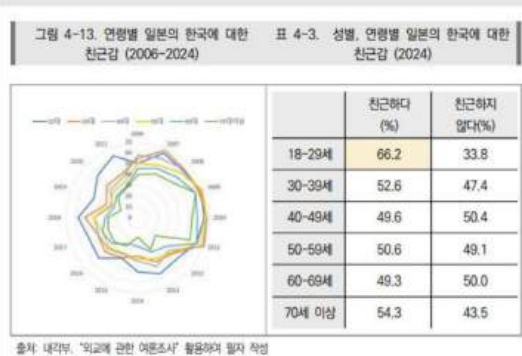
## 2. 한일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

- 한국: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상승
- 일본: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상승



## 2. 한일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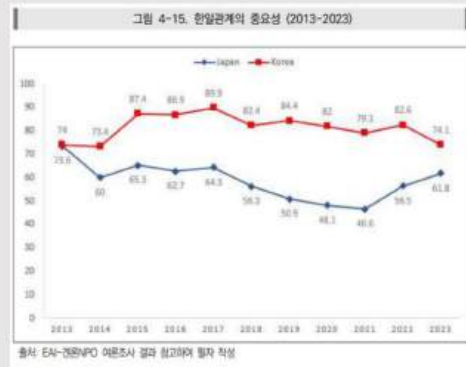
- 한국: 일본 대중문화개방 이후 태어난 세대가 마주하는 일본
- 일본: '한국인이 되고 싶다' 는 일본의 Z세대





## 2. 한일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

- 한일교류 확대 속 비대칭성의 문제
-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한 상이한 인식/이유



## 2. 한일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

- 미래 세대의 한일협력비전: 당위성에서 잠재성과 가능성으로
- 미래 세대의 협력의 방향성과 제언
  - ▣ ‘같이’의 가치 존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유지/수호/발전
  - ▣ 양자 이슈를 넘어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 ▣ 교류의 비대칭성 해소 및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 3. 한일 언론 협력

- 배경: 한일관계에 대한 언론의 영향
- 현황: 언론보도 속 한일관계
- 한일 언론의 협력 비전



### 3. 한일 언론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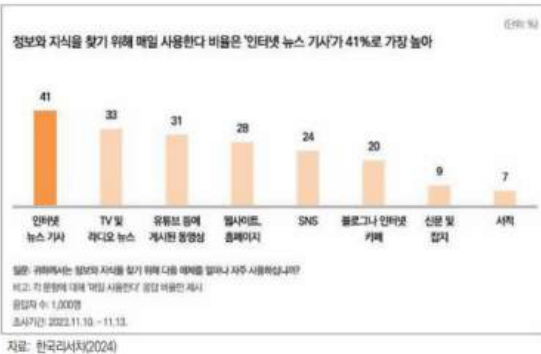
#### □ 현황

그림 4-17. 한일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미디어



자료: EAI(2023)

그림 4-18. 일반인들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미디어





### 3. 한일 언론 협력

- **한일관계-역사/영토 문제 등에 대한 언론 보도의 방향성**
  - ▣ 거짓과 왜곡된 정보 차단
  - ▣ 양측의 주장에 대한 균형있는 정보 제공
  - ▣ 표면적 현상 전달 보다 맥락 중심의 심층 보도 확대
  - ▣ 언론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에 편승한 태도 개선
  - ▣ 언론의 자극적 보도를 통한 상업적 이익 추구 자세 개선



### 3. 한일 언론 협력

- **한일 언론의 협력비전**
  - ▣ 언론사 및 언론인의 자체 노력: 모니터링 강화, 자기 계발 노력
    - [가칭]<한일 언론 모니터링 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 청년 미래 언론인간 교류 및 상호 이해 확대
    - 한일미래저널리즘 등 공동 과목 개설 등을 통한 교류 확대/강화
  - ▣ 인터넷 과학기술 발전 적극 활용 ex. AI 기술 개발



## 4. 문화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 연구배경
- 대일 대중문화 개방과 일본 내 한류 확산
- 문화콘텐츠산업의 교역 현황과 부문별 동향
- 한일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추진 현황
- 문화콘텐츠산업 부문에서의 한일정책협력방안



## 4. 문화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 □ 현황

그림 4-23. 문화콘텐츠산업 대세계 부문의 교역 현황(2005년~2022년)



그림 4-24. 문화콘텐츠산업 부문의 대일 교역 현황(2005년~2022년)







## 4. 문화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 □ 현황

표 4-11. 문화콘텐츠산업 부문의 대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부문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출판	43.1	30.2	55.0	39.9	38.5	47.8	78.5	67.4	3.0
만화	0.3	1.5	8.2	11.6	12.3	15.9	22.8	32.8	1.4
음악	0.8	67.3	242.4	367.3	389.5	320.1	310.5	361.8	15.9
영화	-	2.3	5.0	4.6	4.7	3.8	6.9	9.2	0.4
게임	240.5	435.3	690.7	908.0	684.9	308.5	913.1	1,291.1	56.8
애니메이션	24.7	18.8	23.5	32.7	36.7	26.2	33.9	34.9	1.5
방송	65.5	49.7	71.0	95.8	91.8	80.1	73.0	87.8	3.9
캐릭터	13.8	16.5	34.7	68.2	74.0	66.9	36.4	37.4	1.6
지식정보	11.3	141	214.0	244.1	252.5	265.3	261.8	263.9	11.6
콘텐츠솔루션	12.4	37.8	54.0	70.4	73.8	76.3	81.5	88.3	3.9
합계	412.5	800.2	1,308.5	1,842.6	1,658.7	1,211.0	1,818.2	2,274.6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통계 조사」, 각년도별(2021년 이후 「콘텐츠 산업조사」로 명칭 변경)

표 4-12. 문화콘텐츠산업 부문의 대일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부문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출판	46.8	69.1	55.9	43.6	34.3	23.1	30.2	30.2	25.0
만화	0.8	4.9	6.0	6.0	6.0	5.8	5.2	5.1	4.2
음악	14.3	2.1	2.8	2.7	2.4	2.4	2.9	3.3	2.7
영화	-	1.2	6.7	187.2	4.8	4.7	6.7	7.6	6.3
게임	-	-	61.0	4.8	47.2	36.7	46.4	17.7	14.7
애니메이션	4.9	6.9	7.0	7.7	8.6	7.4	8.3	11.1	9.2
방송	4.7	5.8	8.8	9.6	9.9	8.7	15.8	33.6	27.9
캐릭터	33.1	20.3	18.7	23.3	14.8	15.3	7.2	10.7	8.8
지식정보	-	0.0	0.0	0.7	0.7	0.7	0.8	1.2	1.0
콘텐츠솔루션	-	-	-	0.0	0.1	0.1	0.1	0.1	0.1
합계	104.5	110.4	166.9	285.6	128.8	104.9	123.6	120.5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통계 조사」, 각년도별(2021년 이후 「콘텐츠 산업조사」로 명칭 변경)



## 4. 문화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 □ 한일 공통: 문화콘텐츠 산업 국가전략산업/핵심산업 인식

#### → 정부간 협의를 통해 활용한 양국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모색

##### □ 문화 콘텐츠 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협력

- 시 등 신기술 콘텐츠 적용, 핵심 장르별 집중 육성, 전시회 · 박람회 공동 개최, 콘텐츠 산업의 성장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정책 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 □ 양국 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대책 마련을 위한 공조

- 법/제도/기술 등 대응 현황 공유, 국제 회의에서의 신규 국제 규범 논의 선도

##### □ 한국 콘텐츠 스타트업 일본 진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 일본 진출 시 애로요인 해소방안 논의, 일본 비자, 해외인재 유치, 비즈니스 매칭 등 스타트업 지원제도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로 재직중이며, 일본연구소 소장(직무대리) 및 사단법인 외교광장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 국민대학교 국제학부에서 가르쳤으며, 현대일본학회 회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 토론 1

---

# 토론문

---

**남 기 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 KIEP-EAI 한일국교정상화 60년 학술회의 토론문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외교안보〉

-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한 실용외교의 협력 아젠다 발굴의 의미. 한편 과거사 쟁점이 빠진 미래지향협력의 가능성은 의문.
- 최근의 세계질서 위기의 원인은, 미해결의 역사 문제가 세계정치(지구정치)의 전면에 부상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탈식민이 지구적 과제라는 점.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한일협력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 구체적으로는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목표는 1965년 체제의 한계를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것. 그럼에도 당면 과제는 이것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
- 1965년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1998년 한일공동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에 주목할 필요. 이를 근거로 하고, 2028년(한일공동선언 30년)을 통과지점으로 하여 2030년 체제(한국 병합 120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

### 〈외교안보협력〉

-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국가안보에 있는가? 진영의 구축에 있는가? 제도의 안정화에 있는가? 한일 안보협력이 북중러 협력을 제고시키는 안보 딜레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만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의 대상인가?
- 군사안보 협력의 현 수준은 안보협력? 군사협력? 준동맹? ACSA와 RAA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한미일 지휘통제체제 구축의 현실성은, 그 함의는?
- 일본의 포괄안보국가화에 제약 요인은 없는가? 가령 인구문제, 재정적자 문제 등. 빵과 총(민생과 군수)의 균형

### 〈첨단기술협력〉

- 한일 간 대응한 협력인가? 만일 아닐 경우 경제안보의 리스크로 전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2023년 화이트리스트 복구의 실질적 손실과 이익의 규모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있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 지속가능한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은 첨단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내재한 형태로 가능한가?(그만큼 협력이 서로에게 절실한가?) 아니면 외부적 요인, 즉 과거사 현안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인가?

### 〈경제협력〉

- CPTPP, 한일FTA는 글로벌 자유무역질서 유지에 공헌하면서도 실질 GDP 증가라는 실질적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는 주장에 의문. 글로벌 자유무역질서가 세계경제의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계산한 것인가?
- 2022.2. RCEP 발효로 실질적인 한(중)일 FTA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한일 FTA 체결은 얼마나 더 큰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 한중 FTA라는 선택지는 유효한가? BRICS 가입은 선택지가 될 수 없는가? 북일 국교정상화가 한일협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이며, 그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가?
- 기후위기 대응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제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견국 협력의 사례

#### 〈인문사회협력〉

- 인적/문화교류의 양질전화가 가능한가?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한류/일류의 대류는 양국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성숙한 한일관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상호 친밀감의 증대에도 과거사 쟁점에서 비관적인 여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대중문화의 완전한 개방의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전통적 한일 시민사회 연대와 협력의 자산을 세대간에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 근대 문명론을 넘어서는 문사철을 인식의 기반으로 공유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공동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



일본 추오대학교 종합정책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후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참서관 보좌역, 호세이대학교 인간환경학부 특임준교수, 리츠메이칸대학교 객원준교수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다.

## 토론 2

---

# 토론문

---

**이토 코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



# 「한일 외교·안보 협력 미래 비전」 토론문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 연구원

호세이(法政)대학 특임·임기제 준교수

이토 코타로(伊藤 弘太郎)

## 서론

한일 외교·안보 협력 미래 비전을 고민함에 있어, 왜 「군사 안보 협력」,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 협력」, 「기후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비전」 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선택했는가?

→ 이미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 있는 경제·문화적 유대 관계를 다시금 인식 할 필요가 있음.

## 1. 군사 안전보장 협력

### (1) 2050년 한국과 일본의 안보 환경 결정 요인

- ① '미국 패권 쇠퇴'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음.
- ②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으로 인해 북한의 일반 무기 능력 향상의 가능성
- ③ 중국의 핵 능력 강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 → 긴급 과제인 중국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호주 포함) 전략적 다자간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④ 북·중·러 3국 간 핵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뜻하는지 → 협력국가 간 관계와 협력 수준은?

### (2) 일본과 한국의 군사 전략 - 한일 공동 대응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그 가능성

- ① 일본의 군사 전략  
(자위적 안보체제 →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포괄적 안보 국가 → 헌법 개정이 가능할 것인가?)
- ② 한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 언급(명시) 없음 → 한국 국방 정책의 근간인 '3축 체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 ③ 미일 동맹의 재구성 및 심화 → 한미 동맹과의 전략적 협력·동맹국 관계 발전에 기여 →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정신(2023년8월)을 이재명 정부가 계승할지 여부?

## 2.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 협력

- ① 문재인 정부와 일본 아베 내각 간 대북정책 관련 협상 → 장기적으로 일본의 지원과 관여는 여전히 필요
- ② 한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경제권 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3. 기후 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비전

- ① 수소 에너지 분야 한일 협력 - 양국은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균형있게 조율할 것인가?
- ②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 협력 → 석유 정제 제품 공급국으로서의 한국과 일본
- ③ 원자력 안전 운용을 위한 한일 협력

## 결론



## 토론 3

---

# 토론문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  
주임조사연구원이다. 규슈대학교 대학원  
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아시아  
경제연구소에 입소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특별연구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방문연구원 및 아시아경제연구소  
신영역연구센터장을 역임하였다.

## 아베 마코토

---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조사연구원





## 토론 3

安倍 誠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 국제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일·한 통상정책

■제1국면 2010년대 중반 이전: 글로벌화의 진전

- WTO, FTA,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제2국면 2010년대 후반 ~2024년: 미중 대립

- 미국 중심 경제안보에 동참
- RCEP, CPTPP 등을 통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강화 시도

■제3국면 2025년 이후: 미중 대립 심화와 미국 보호주의

- 미국 중심 경제안보나 MAFA에 동참·협력
- 미국이 없는 경제안보 협력의 추구
- 자유무역체제 유지·강화 시도

## 앞으로 일·한경제협력

(1) 기존의 일·미·한 협력, (2) IPEF, 자원공동개발등 공급망협력,  
(3) 한국의 CPTPP가입, 새로운 자유무역 틀 구상등.

### ■ 이재명 신정권의 외교정책

- 국익중심, 실용외교
- 한미일 협력의 유지, 강화

### ● 미국이 없는 일·한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나설까?

➢ CPTPP 가입: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

### ● 다국간협력, 자유무역체제 유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선진국, 무역대국으로의 책임

- IPEF협력, EU, 캐나다, 호주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유무역협력 틀의 구축

3

## 일·한 공급망협력과 산업기술협력(1)

### ■ 일·한 협력의 필요성

- 투자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공동투자로 리스크 저감
-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함
- 국제규범, 인증제도에 공동대응

### ● 자원공동개발: 일본의 JOGMEC, 한국은 ?

### ● 산업협력, 기술협력

- 일·한 에너지 협력: 제3국 공동진출

✓ 일본종합상사의 국내·해외 네트워크와 자금조달 능력, 한국 에너지 기업, 엔지니어링 기업의 플랜트 건설 운영능력

\* 수소 협력도 같은 scheme이지만...

- 과제: 한국 화학기업의 구조조정, 수효산업 수소활용의 지체(자동차, 철강 등), 일본 고유의 그린수소 인증기준 등
- 암모니아 발전에 대한 최근 유럽 태도 변화는 고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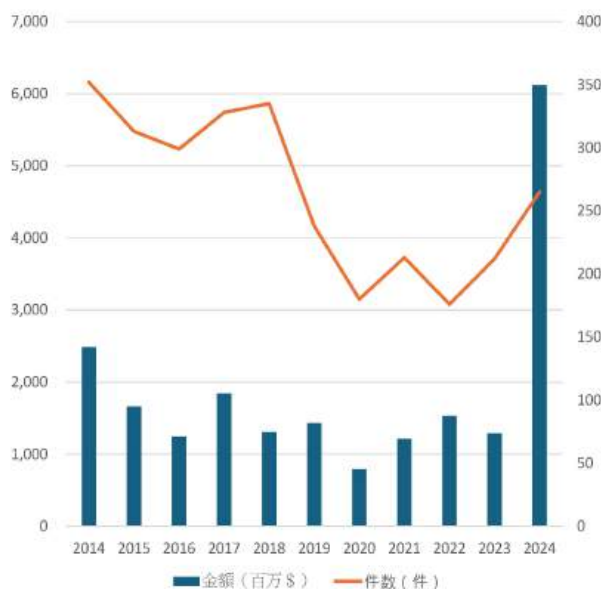
4

## 일·한 공급망협력과 산업기술협력(2)

- 여전히 활발한 반도체, 정보통신서비스(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한일비즈니스
- 향후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따라 일·한 기업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가능성
  - 반도체 협력 유망분야: packaging협력, 반도체 클러스터 간 협력, (키옥시아와 SK하이닉스의 전략적 제휴(합병?)) ...
- ✓ 국제산학협력 : Tokyo Electron 한양대에 연구센터 설립
- AI를 포함한 핵심 디지털 기술 분야의 한일협력 긴밀화
- 일·한 정부가 반도체 디지털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필요
- ✓ 국제 표준화 공동 추진, 일·한 디지털 협정 (일본의 CPTPP, 한국의 DEPA)

5

## 외국인직접투자(일본→한국)



신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KSIC분류	2023년		2024년	
	신고건 수	신고금액	신고건 수	신고금액
전체	212	1,286,957	265	6,120,987
제조업 계	74	639,977	115	4,870,358
식품	3	2,421	7	118,565
섬유·직물·의류	0	0	3	120,370
화학·목재	2	864	0	0
화학	17	232,230	28	1,169,558
의약	3	32,772	1	220
비금속 광물제품	8	91,351	2	50,748
금속·금속가공제품	8	50,358	5	400,000
기계장비·의료장비	11	57,899	26	1,231,756
일반목적용 기계	4	18,614	11	334,679
가공공작 기계	5	9,503	5	227,799
기타특수목적용 기계	1	76	2	170,000
의료용 기기	0	0	3	497,049
전기·전자	16	144,058	34	1,388,687
전기장비	4	22,733	19	837,040
컴퓨터 및 주변장치	0	0	2	130,000
반도체	3	18,687	4	250,000
전자부품 제조	6	89,414	5	104,384
운송용 기계	6	28,022	6	390,080
자동차부품	2	16,327	5	320,080
서비스업 계	133	640,721	146	1,076,228
도·소매(유통)	55	119,295	61	164,353
정보통신	23	251,040	28	715,096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99,088	14	669,194
금융·보험	14	89,143	12	89,536
부동산	0	0	1	1,467
사업지원·임대	3	10,155	6	6,524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8	103,014	23	27,108
여가·스포츠·오락	2	307	4	3,738
공공·기타서비스	3	520	2	13,380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계	5	6,259	4	174,401
전기·가스	3	5,947	1	90,000
수도·하수·환경정화	1	77	2	83,000
종합건설	1	235	1	1,401

6





일본 세쓰난대학교 국제학부 준교수이다. 전문분야는 언론학, 역사사회학, 국제사회학이다. 도시샤대학교에서 미디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리츠메이칸대학교 코리아연구센터에서 전문연구원을 지냈으며, 오타니 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리츠메이칸 대학교 객원준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대한국조선학회(일본)이사, 한일 국제 학술대회 이사, 송실대학교 송실평화통일 연구원 '송실평화통일논총'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 토론 4

---

# 토론문

---

**모리 도모오미**

세쓰난대 국제학부 준교수



# 「한일 인문·사회 협력의 미래 비전」 (최은미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에 대한 의견

세쓰난(摂南) 대학  
모리 도모오미(森 類臣)

## 1. 한국과 일본의 인구 변화와 지방 소멸

- 1)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합계출산율의 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양국의 사회 구조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전제가 타당한가?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은행 등의 자료를 보면 한국과 일본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며, 지방소멸에 대해서도 아래 2)에서 언급하듯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 2) ‘지방소멸’에 대해, 슬라이드 5에 게재된 ‘그림 4-4 일본의 2050년 무렵의 지방소멸 전망’은 마스다(2014)를 인용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카모토(2014), 오다기리(2014), 오카다(2015)의 반론이 대표적이다.
  - 오다기리 도쿠미. 2014. 『농촌·산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와나미 신서.<sup>1)</sup>
  - 사카모토 마코토. 2014. 「『인구 감소 사회』의 함정」. 『세계』 9월호. pp.201-208.<sup>2)</sup>
  - 오카다 도모히로. 2015. 「지방 소멸론 비판: 지역 경제학의 관점에서」. 『농업 문제 연구』 47(1). pp.4-13.<sup>3)</sup>
- 3) ‘한일 간의 청년 및 스타트업 인재 교류’가 ‘인구구조 위기’에 어떻게 효과적인 대응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술 협력’이 (지방소멸이라는 전제가 타당하다는 가정 하에) 어떤 방식으로 이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과정 중심의 서술이 필요하다.
- 4) ‘한일 공동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는 매우 흥미롭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교토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관광 공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이 덜 알려진 지역 간 관광 협력에 나선다면, 문화 교류는 물론 경제적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 2. 한일 미래 세대의 상호 인식과 교류, 협력

- 1) 슬라이드 10의 ‘표 4-3 연령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2024)’에서 18-29세 일본인 중 ‘66.2%’가 한국에 친근하다고 답했지만, 2010년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2010년 10월 조사)에서도 당시 20~29세 일본인 중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은 70%에 가까웠다. 해당 세대는 2024년 기준 ‘30~39세’ 또는 ‘40~49세’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근감’ 역시 변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반영해 ‘미래 세대’ 교류와 협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1) 小田切徳美. 2014. 『農山村は消滅しない』. 岩波新書  
2) 坂本誠. 2014. 「『人口減少社会』の罫」. 『世界』 9月号. pp.201-208.  
3) 岡田知弘. 2015. 「地方消滅論批判: 地域経済学の視点から」. 『農業問題研究』 47(1). pp.4-13.

- 2) 일본의 Z세대가 한국에 갖는 인식(‘한국인이 되고 싶다’ 등의 한국에 대한 동경)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 ‘동경’은 아이돌이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이나 호감이, 이른바 ‘K-스타일’로 대표되는 한국의 선진적인(자본주의 최전선의) 물질문화에 대한 동경과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의 역사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Z세대가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은 매우 협소한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바깥의 현실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 있다.
- 3) 발표자가 언급한 ‘비대칭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또한 그 ‘비대칭성’이 왜 문제인지, 어디까지가 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

### 3. 한일 간의 미디어 협력

- 1) 슬라이드 15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은 이미 학계(언론학회 등)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핵심은 언론 보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방향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이다.
- 2) 슬라이드 16에서 지적했듯,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발표자가 제안한 [가칭]〈한일 언론 모니터링 위원회〉는 업계의 자율적인 자원 조달을 기반으로 하며, 정부 예산이나 특정 기업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운영 구조라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위원 구성 시 한일 양국의 언론인뿐만 아니라 연구자, 타국 전문가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를 점검하는 기구라면 정치적·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적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 위원회와는 다른 차원의 기능이다).
- 3) 대중 매체의 보도 개선만으로는 건전한 저널리즘 환경 조성이 어렵다. 향후에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탈진실(Post-truth)’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4. 문화 협력: 문화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 1) 한일 간 문화 협력의 정의나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누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협력할 것인가? 정부 주도형(공공 외교 차원), 경제계 중심(문화 콘텐츠 산업의 원원 전략), 시민 차원(사회 운동) 등 협력의 형태에 따라 방향성과 과제가 달라지며, 상호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
- 2) 발표자가 언급한 ‘문화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 산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대중문화 관련 콘텐츠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관여 범위와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3) 문화 협력의 목적 중 하나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문화·역사의 지속적 이해와 학습이라면, 음악·게임·드라마와 같이 상업화가 용이한 분야 외에도 전통문화, 현대미술, 연극, 지방의 무형 문화재 등과 같은 덜 주목받는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 이러한 분야는 정부 예산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공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 4) 1998년 발표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관계의 중요한 원칙적 기반이 되어 왔다. 이 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인식은 미래지향적 관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문화 협력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문화재 반환 문제는 중요한 분야이다. 이는 문화 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와 문화 현지주의(Cultural Localism) 간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고, 한일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진지하게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 5) 한일이 공동으로 긍정적인 ‘기억’을 ‘재생’하고, 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 17~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가 201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며, 이는 일본의 NPO단체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와 한국의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의 공동 협력으로 이뤄졌다.<sup>4)</sup>

중앙정부가 아니더라도, 지방정부나 NGO·NPO 차원에서 긍정적 ‘기억’ 유산과 관련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근현대사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역사에서 문화유산 협력의 출발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5. 기타

발표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교육 분야의 한일교류는 양국 협력의 핵심 영역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4) 상세한 내용은 UNESCO 해당 홈페이지 참조.

UNESCO. 「Documents on Joseon Tongsinsa/Chosen Tsushinshi: The History of Peace Building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17th to 19th Century」. <https://en.unesco.org/memoryoftheworld/register/408>

[illegibl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margin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column for notes or a head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margin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column for notes or a head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margin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column for notes or a head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